

[댐 소재지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건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비는 8월 중순이 돼서야 그쳤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인 54일 동안 이어진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기상이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물폭탄 피해를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 재해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댐 관리주체의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실제로 이번 호우 때 단기간에 집중방류가 이루어진 댐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능력 부재와 부실이 초래한 인재로, 수위조절을 위한 사전방류 등의 적절한 조치와 댐관리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 대응했다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에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댐 관련 지원 사업 업무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합니다.

첫째,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입니다.

최근 한반도에 상륙한 3개의 태풍은 모두 ‘강’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바꿔놓은 ‘기후재앙’으로 앞으로 그 빈도는 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물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현장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홍수예보와 댐 방류 등의 소관업무는 환경부인 반면, 하천의 계획·정비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국토부로 각각 나뉘어 여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는 정부가 국정과제인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현재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계획 및 시설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조속히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댐 관리규정의 전면 재개정 및 세부 매뉴얼의 현실화 마련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수자원관리의 매뉴얼을 새롭게 개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측과 정보전달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초기 강우량의 예·경보로부터 최종 대피계획까지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을 빨리 전파할 수 있도록 초고속통신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원격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조속히 도입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댐 물관리 매뉴얼에 있어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과 같은 동네단위의 사전 예방적 알림 시스템을 만들어 하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댐 관리 운영규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 댐 소재지 주변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합니다.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우리 협의회는 수자원공사의 원수 판매액의 일정금액과 다목적댐의 발전량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액을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6년 동안 제자리인 ‘지원사업 출연금’의 비율 현실화를 요구하며, 올 여름 극심한 장마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0. 9. .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장



대덕구청장, 임실군수, 춘천시장, 횡성군수, 화천군수, 충주시장, 보령시장, 진안군수, 부안군수, 순천시장, 광양시장, 장흥군수, 안동시장, 영천시장, 청도군수, 군위군수, 진주시장, 밀양시장, 합천군수

수 신 처 :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